

【 2019.7.22(월) 강원도민일보 】

도의회 신관청사 증축 지역제한 입찰

이번주도의회 신관청사증축공사입찰이 지역제한 조건으로 실시된다. 21일 강원조달청에 따르면 오는 25일 도의회 사무처가 발주한 '강원도의회 신관청사 증축공사'에 대한 입찰이 2억6900만원의 추정가격으로 진행된다. 올해까지 도내에서 진행된 입찰은 2319억원(137건) 수준으로 전국 6만5564억원(1526건) 중 3.54%를 차지했다.

건설산업, 동맥이 다시 뚫린다

고사 직전까지 내몰렸던 건설산업의 맥박이 다시 뚫 채비를 하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적지않은 공사물량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업계의 오랜 숙원인 적정 공사비 확보도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정책기조가 바뀌면서 건설산업이 국가 경제의 중추산업으로 다시 부각되는 모양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건설산업에 대한 일련의 정부 정책이 건설 친화적으로 전환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집권 초기 'SOC 확대론'으로 대표되던 색안경을 벗고 건설산업 활성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모습이다.

우선 물량 측면에서 대규모 사업들을 잇따라 발표했다. 지난 1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총 23건, 24조1000억원 규모의 예타면제 사업을 발표한 데 이어 3월에는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내놨다. 문화·체육시설 등 핵심 생활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으로, 지방비를 포함해 3년간 사업 규모는 48조원(국비)에 달한다. 여기에 인천 북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하자 지난 달 노후 인프라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2023년까지 총 32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상반기 발표된 SOC 투자의 총액은 무려 104조원을 넘는다. 물론 중장기에 걸쳐 예산이 집행될 예

경기 활성화 다급해진 정부
홀대 접고 친화적 정책 선회
예타면제·노후 인프라 개선
생활SOC 확대 등 적극 행보
상반기에만 104兆 투자 발표
적정비 등 제도 개선도 공감

심층기획 2·3면

정이지만, '삽질 예산'이라고 SOC를 깎아내리던 집권 초기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다. SOC가 국가균형발전, 삶의 질 향상, 국민 안전 등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정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정부의 건설산업 활성화는 단순한 물량확대에 그치지 않는다. 공정한 게임의 룰을 통한 선순환 경제로 이끌기 위해 제도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적정 공사비 확보로 실현되는데, 정부도 이에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도 개선 역시 지난 1월 정부가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출발했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지난 2월 '규제 정부책임 입증제' 시범사업을 통해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5월과 6월 계약예규 개선을 완료하면서 가시화했다. 여기에는 종심제 가격평가 개선, 적격심사 시 사회보험료 등 제

외, 불합리한 예정가격 산정 관행 개선, 간접비 지급기준 개선 등 그동안 업계가 건의한 사항이 다수 반영됐다.

정치권도 가세했다. 지난 15일 '공공건설 상생협력 TF' 선언식에 이어 18일에는 발주기관의 갑질 근절, 공사비 현실화 등의 내용이 담긴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상생협력 TF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고, 국가계약법 개정안 통과에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에 이어 여당의원들도 힘을 보탰다.

이와는 별도로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노·사·정 협의체를 운영 중에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와 정치권 모두 건설산업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활성화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를 통해 그동안 위축됐던 건설산업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활기를 되찾는 것 같아 반갑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SOC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고 이에 따른 적정공사비가 확보돼 건설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건설산업 활성화가 국가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희훈기자 hoony@

“강원도, 남북경협 상징성 커... 활성화땐 적극 지원 정부 SOC 정책 전환 환영... 지역맞춤형 투자 필요”

“남북경협이 본격화하면 가장 먼저 달려가려고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도 북한과 인접해 있지만, 화합의 상징적인 의미는 강원도가 더 앞선다고 생각한다.”

오인철 강원도회장은 인터뷰를 시작하자마자 남북경협 이야기부터 꺼냈다. 지난 4월 ‘강원도 남북건설교통협력협의회’가 출범했다. 강원도와 강원건설단체연합회가 손잡고 출범시킨 협의회에서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오 회장은 “강원도는 남북경협의 상징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에서 도가 남북으로 갈린 곳은 강원도뿐이다. 분단국가 내에서도 분단된 지역이다. 남강원도에 150만명이 살고 북강원도에도 그 정도 인구가 있다. 남북경협의 문이 열리면 북강원도부터 개발해야 한다. 강원도 남북건설교통협력협의회가 출범 취지도 선제적인 개발에 있다”고 말했다.

대략적인 경협의 윤곽도 마련했다. “남쪽에서는 장비와 자재를 가지고 들어가고, 북에선 인력을 대고, 공사비는 지하자원(광물)으로 가져온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정부의 지원이 요구된다. 오 회장은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이 고성 DMZ에서 평화경제의 길을 선언할 때 강원지역 경제단체연합회장 자격으로 신규 도로·철도 사업을 적극 건의했다. 휴전선 일대가 개발제한에서 풀리면 무엇보다, 우선 도로가 깔려야 개발이 이뤄진다. 문 대통령도 동해북부선 강릉~제천 간 조기 연결,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철 개발 등으로 화답했다”고 설명했다.

사실 강원지역 건설산업은 남북경협에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도내 회사



올림픽 이후에 수주·기성액 줄고
병력 감축으로 軍 공사도 축소돼
지역건설사, 경험 기대감 높아
문화시설 등 확충 중요하지만
노후 상하수도 교체가 더 시급

수주액과 기성액은 모두 10% 가까이 줄었다. 2015년 2조9700억원에 달했던 수주액은 지난해 2조3500억원으로 떨어졌다. 도내 공공공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군부대 공사도 병력 감축 기조에 따라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오 회장이 남북경협 활성화를 외치는 이유다.

지난 2015년 6월 강원도회장에 취임한 오 회장은 회원들의 만장일치 추대로 연임에 성공했다. 경선이 심심찮게 치러지는 요즘 만장일치 추대 연임은 드문 케이스다.

이는 지난 4년 임기 동안에 이룬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오 회장은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과 인프라 공사에 도내 건설사 참여 비율을 최대 49%까지 이끌어내며 지역경제 활성화

화에 앞장섰다. 도내 건설관련 유관기관과 매년 30차례 이상 간담회를 갖는 등 업계 현안을 알리고 해결하는데 백방으로 뛰었다.

내실도 다졌다. 신규회원 가입 촉진활동을 전개해 해마다 두 자릿수 이상의 꾸준한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 결과 강원도회는 회원 수 543개사로 가입률 78%를 자랑한다. 200개사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시·도회 중에는 단연 ‘톱’이다. 강원도회는 올해 초 대한건설협회 최우수 시·도회로 선정되기도 했다.

다시 4년 동안 지역 건설산업을 책임질 오 회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만장일치 추대는 화합과 소통을 최우선하라는 회원들의 준엄한 요구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열린 협회, 가까운 협회, 찾아가는 협회’가 되어 회원사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집권 초기 건설산업에 대한 선입견에서 벗어나 최근 예타면제, 생활SOC, 노후 인프라 등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오 회장은 정부의 정책 전환을 반기면서도 ‘맞춤형 투자’를 언급했다. 그는 “강원도는 도서관·문화시설 등의 생활SOC보다 노후 상하수도 교체가 시급하다. 상수도의 누수율은 30~40%에 달한다. 사업 목적에 얽매이지 말고 SOC 예산을 각 지역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투입하는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오 회장은 “업계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건설협회와 공조해 어느 때보다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지난 4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4년은 한단계 더 도약하는 협회와 보다 나은 건설산업의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희훈기자 hoony@